

공공경제

www.kipf.re.kr

연중기획

2021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도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정책리포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 소개

전문가의 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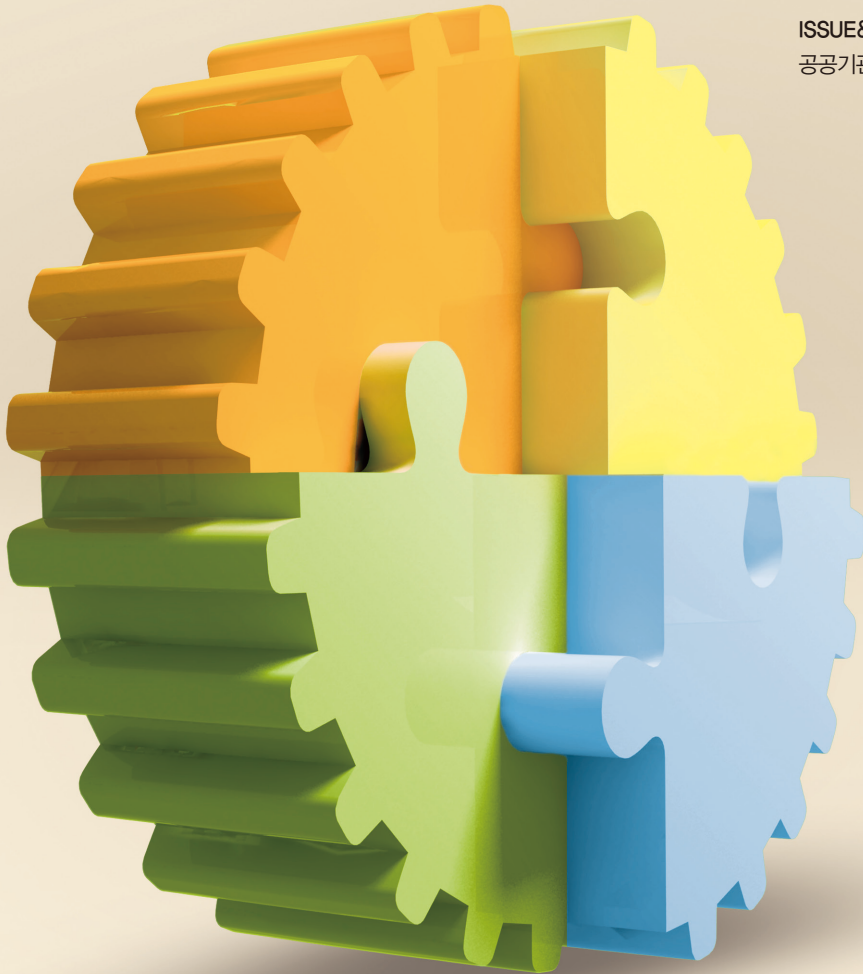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전문가의 눈 II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ISSUE&TALK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공공기관의 역할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어느새 한국판 뉴딜의 첫돌이 지났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휩싸이면서 과연 한국판 뉴딜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은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대면 거래와 교육이 확산됐고,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에 관심이 많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네 개의 축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이 두드러진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비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AI 기반 완전 통합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를 설립한 것들이 눈에 띈다.

스마트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 기존의 건설인력을 스마트 건설인력으로 전환한 성과, AI 활용, 채용서류 자동심사시스템을 적용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인 사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을 구축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도입해 경부선 등 3개 노선에서 실증사업을 완료했으며,

저수지 재해예방 계측기 설치율도 대거 올라가는 등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인프라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균형 뉴딜 부분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선두로 10대 혁신도시별로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를 발굴 및 추진했으며,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등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를 설정하고,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 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응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 한국판 뉴딜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투자 규모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피드백과 튜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N포 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자조감에 빠진 청년층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향후 5년간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이에 부응해 혁신·협업을 통해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뉴딜의 성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contents



권두언

03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공공기관의 역할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연중기획_2021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08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도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이보인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기획특집_공공부문 규제완화

14 정책리포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 소개

구영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수석연구원

17 전문가의 눈 I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원

20 전문가의 눈 II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규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원

23 ISSUE&TALK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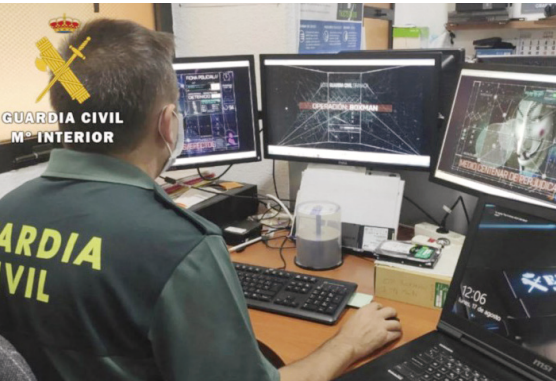
CEO 인터뷰

2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유 있는 변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하겠습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34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강원랜드, 국민의 행복쉼터로 새로워집니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공공기관 정책동향

40 공공기관 주요 정책동향

글로벌리포트

42 무역업체의 골칫거리, 글로벌 무역사기단 소탕에 한 걸음 다가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마드리드무역관

공공혁신 이야기

48 빅데이터 기반 중소벤처 혁신성장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4 이젠 속지 마세요! 토지이상거래 알려줄게요!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채용정보

60 공공기관 잡앤톡(Job&Talk)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연구원

66 현직자 인터뷰 I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송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과장

68 현직자 인터뷰 II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때요?
김병찬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대리

70 나의 취업성공기 I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선우태용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연구원

72 나의 취업성공기 II
장애채용의 날개를 달다!
이주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내과심사부 5급대리

74 미디어칼럼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
김정민 이데일리 경제부 부국장



이번 공공경제 Vol.08는 어떠셨나요?

『공공경제』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독자분께는 보내주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경제

『공공경제』 2021년 Vol.08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인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최예나, 김정은, 소병욱, 유승현 조우리, 김민지
자문위원	김동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남궁덕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교수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 바 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화 (044) 414-2427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한 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왔다. 이에 『공공경제』에서는 올해 <연중기획> 주제로 한국판 뉴딜을 다루면서 '디지털 뉴딜'(5호), '그린 뉴딜'(6호), 그리고 '휴먼 뉴딜'(7호)에 관해 살펴보았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한 해 동안 쉽 없이 달려온 한국판 뉴딜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자 한다.





연중기획

2021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도국가전략, 한국판 뉴딜_기획재정부

01

기획재정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도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이보인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기후 변화 위기의식 속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돼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한국판 뉴딜'과 맞닿아 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이 바로 디지털·그린 뉴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으로 시작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씬 없이 달려온 미래 대응 전략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취한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시작해,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택근무 등으로 비대면 수요 및 인공지능(AI), 5G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충격과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세 가지 구조변화에 모두 대응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전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휴먼 뉴딜', 뉴딜 성과를 전국에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돼 있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대책들도 마련됐다. 9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마련됐으며, 2021년 7월에는 그동안 변화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계획을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2.0 계획에 따라 기존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대폭 보강됐으며, 디지털·그린 뉴딜도 새로운 과제가 보강됐다.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해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뉴딜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국비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도 병행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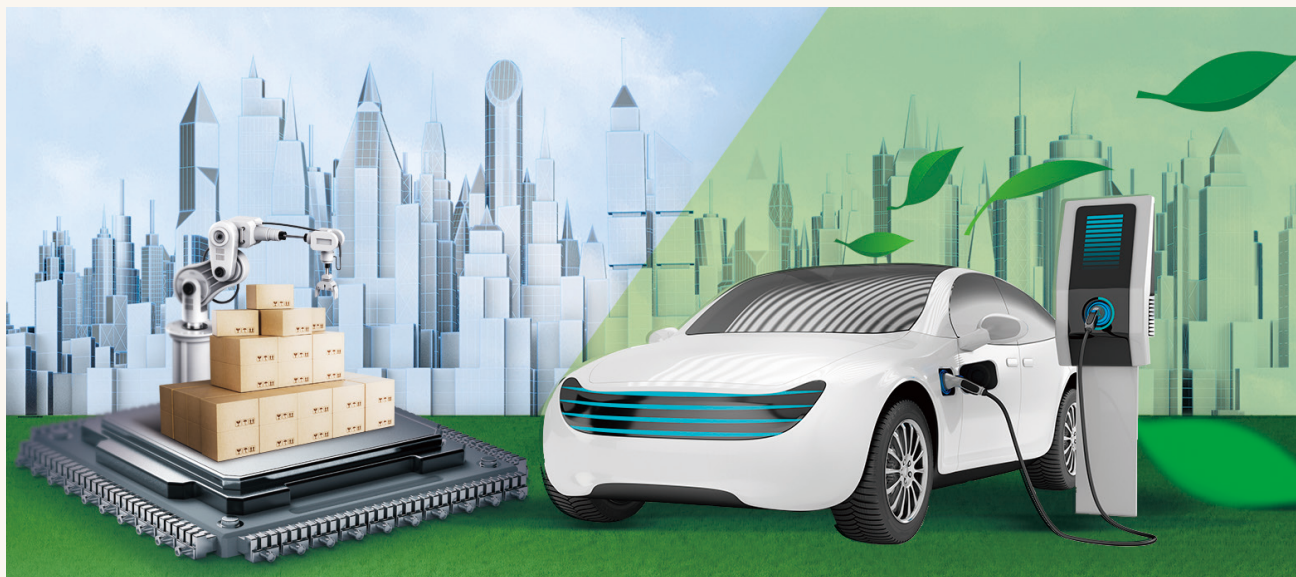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온 마중물, 재정투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2020년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 5조 4천억원을 편성해 투자했으며, 2021년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경로 창출을 위해 27조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순조롭게 집행 중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재정투자를 통해 2021년 17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신규로 개방했으며,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180개의 센터를 신규로 구축했다. 14만 2천개의 공공데이터도 개방해 활용도를 높였다. 지능형 정부를 위해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전국 38만개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대장암 등 8개 질환 진단이 가능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도 개발했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 8만개사에 '비대면 바우처'를 제공했으며, 2021년에도 6만여 개 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민안전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C 디지털화 작업도 추진해 왔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2020년 노후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8만여 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0년 설비구축 목표인 4.2GW를 초과달성했으며,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조성 중이다. 친환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는 21만 8천대, 수소차는 1만 8천대가 보급됐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약 10만 기, 수소충전소는 118개소를 구축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린 뉴딜 유망기업 71개사 선정 및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돼 6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기초 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K-Digital Training 등 혁신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공지능대학원, SW중심대학,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등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채 초과발행 절차 간소화, 우수사업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 핵심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 각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가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전환 입법 과제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민간 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도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뉴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및 정치계와 함께 ‘법·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현재 24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기준으로 선정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안 중 2021년 11월 말 현재, 24개 법률안의 입법이 완료됐다.

분야별 주요 입법 내용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서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및 데이터 생산·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정보법’ 등의 입법이 완료됐다.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규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개정,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거래(PPA) 허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가 완료됐다. 휴먼 뉴딜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원격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이 완료됐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판 뉴딜과 민간 혁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문도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호응했다. ‘초거대 AI’ 개발, 데이터센터 신축, 대규모 해상풍력 투자, 수소 경제 투자계획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함께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4조원 조성 목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초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 속에 출시 6일 만에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민·관의 적극적이고 하나 된 노력 덕분에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이 완전히 안착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 플랫폼과 같다. 정부가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다양한 경제 주체가 그 위에서 마음껏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 앱스토어(App Store)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라는 미래 정책 플랫폼이 민간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머그잔을 잡으면 모두가 좋아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나무를 살리고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 사용! 모두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공공부문 규제완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정부가 공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을 완화하는 측면, 둘째, 공공기관이 유사행정규제 주체로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심층적으로 다루어본다. ‘정책리포트’에서는 유사행정규제 주체로서 스마트시티 샌드박스제도를 소개한다. 이어서 ‘전문가의 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ISSUE&TALK’에서는 유사행정규제 수행과정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정책리포트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 소개

전문가의 눈

-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ISSUE&TALK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구영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수석연구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우리나라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토대를 구축한 이후, 2017년에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개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순한 인프라 수준을 넘어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동력 창출까지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2019년 1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이듬해인 2020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을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로 한정했는데, 2020년 9월에 개최된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등 5개 지역이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총 9개 분야에서 35가지의 혁신 서비스와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과 민간기업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을 추진했고, 전담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지정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¹⁾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창기에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의 총괄계획단과 소통하며 각 도시의 핵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규제에 가로막힌 18개 서비스를 발굴해 기업별 상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규제 관련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 실증지역 지자체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사업실증 계획을 구체화했다.

2020년에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계획 및 설계 단계를 생략하고 실증사업을 곧바로 공모해 규제특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

1) 2020년에는 전담기관을 아원화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업공모 및 사업관리를, 건축공간연구원도 규제분석 및 심의 지원을 분담해 수행함

[그림 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유형



[그림 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분야



화했다. 자유공모 외에도 지정공모를 도입했는데,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을 기초로 지자체와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시행기관과 협의해 각 도시에서 4개씩 8개의 지정공모 서비스 분야를 도출했다. 공모 결과 9개의 실증사업을 발굴했고, 그중에서 7개의 사업이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증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타 규제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규제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매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상시 접수 및 신청 방식으로 전환해 부처 간 제도운영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은 세 가지다. 규제의 존재 여부를 소관부처에 문의해 30일 내에 회신받는 ‘규제신속확인’,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혁신사업’, 그리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그림 3]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사업승인 절차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시험 및 검증하는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각각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정의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인 혁신기술·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로 분류할 수 있다. AI·데이터, 스마트 IoT,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윈, 교통,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친환경, 안전, 생활, 그리고 로봇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기관에 상담과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담기관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증대상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추천한다.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국토부에 규제심의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규제 법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규제심의 안전을 상정한다. 신청 사업이 심의에서 승인되면 국토부는 승인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지난 2020년 9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특례안건 심의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총 4회 진행됐으며, 스마트실증사업 24건과 적극해석 6건 등 모두 30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로봇,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실증됐거나 현재 실증되고 있다. 그중에는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과 전동보장구 사용자 운행보조시스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는 단순한 첨단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계약이 종료된 6개 실증사업에 참여한 32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평균 77.3점을 받을 만큼 실증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하향식 규제 발굴이다. 규제 개선 아이템을 민간기업에 의지하는 지금의 상향식 발굴에 더해, 규제 관련 법령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민의 참여다. 리빙랩 등을 활용해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5G 기반 시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이미지 제공: 베이리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한국은 후발 추격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국가다. 중화학공업부터 IT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노력해왔지만, 주력 수출품목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주력산업 성장에 있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 성장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IoT,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technology enabler)의 등장과 전(全) 방위적 융합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인맞춤형(personalized)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 산업의 창출과 더불어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성장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이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부는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and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전자화 혁신을 위한 기회 제공이라면, 후자는 혁신이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다. 조정자로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규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나 효율성은 여전히

〈표 1〉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중 규제 및 혁신 순위

연도	국가경쟁력 순위	규제		과학기술경쟁력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효율성	기술수용성	혁신
2019	13(141)	87	67	-	6
2018	15(140)	79	57	-	8
2017	26(137)	95	56	29	18
2016	26(138)	105	59	30	20
2015	26(140)	97	74	24	19
2014	26(144)	96	113	25	17
2013	25(148)	95	101	22	17

주: 1) 2020년은 코로나19로 미발표
2) 2018년부터 평가체계 개편으로 '기술수용성' 항목 삭제
자료: WEF 각 연도 국가경쟁력 보고서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1〉 참조). 혁신과 관련한 순위는 항상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높지만 정부규제 부문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창출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공공부문 규제개혁의 딜레마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초점은 민간부문에 맞춰져 왔다.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문제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변화는 공공부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의료, 교육, 복지, 국방 등을 살펴보면 민간과 달리 혁신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은 왜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risk)에 대한 접근 관점의 차이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 성향이 크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공공부문에 독과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은 수월성·효율성보다 보편성·무과실을 지향하는 유산(legacy)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론이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는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할 경우 책무성(accountability) 소홀을 추궁받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 책임문제로 민간에게 잘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공공독점을 재편하는 것에 저항이 크다.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공공부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특정 계층·신분·기관 등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자격증처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자본을 특정 주체에게 주어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시키려 한다. 하지만 ICT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혁신 원천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새롭게 만든다. 이때 기존 공공독점을 갖고 있던 주체는 독점권 와해 위기를 맞게 되고, 안정성 훼손의 이유를 들어 혁신이 도입되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 교육의 도입에 대해 기존 체제가 저항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위계(hierarchy)의 발달은 혁신을 저해한다. 공공부문의 특징 중 하나는 위계가 민간부문보다 매우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위계를 활용해 왔으며, 마치 피라미드 같은 위계가 좋은 관리체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계의 발달은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대표적으로 공무원, 군대, 학교 등의 공공조직을 들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창의성이 필요한 혁신은 위계가 발달한 조직에서는 나올 수 없다. 대신 위계적 조직에서는 규제의 눈덩이(snow ball) 효과가 크다. 위에서 만든 조그만 규제가 아래로 갈수록 책임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확대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법에서는 포괄적 규제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관리기관의 운영요령 등으로 규제 자체의 위계가 발달한 한국적 상황은 혁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혁신과 규제개혁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4차 산업혁명만은 단지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도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시기가 온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규제개혁에서 자원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이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조직 종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감사와 여론이다. 이는 개인과 소속기관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직업 안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적극행정제도와 같은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공공부문 평가에서 책무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발전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위험을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를 과거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여전히 혁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 독과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 독과점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

계적으로 독과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재편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독점적 상징자본 부여 체계를 재설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이와 관련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기적 여론과 정무적 판단 위주로 접근할 경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피해야 할 사항은 공공부문이 민간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우월적 지배력을 가진 공공조직이 신생 민간기업을 압도할 수 있지만, 결국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평적 조직관리와 함께 민간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의 관료제는 뿌리가 깊어서 단기간 내에 이를 전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가능한 한 실무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조직 내에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실무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인적교류와 더불어 정부-민간의 공동규제(co-regulation) 확대가 필요하다. 빠른 기술발전과 방대해진 규제적용 범위를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눈 II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규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아이콘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특히 규제 개혁 혹은 규제혁신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역대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각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손톱 밑 가시, 규제전봇대, 덩어리규제 등 여러 키워드가 떠오른다. 현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신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규제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는 이러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규제혁신정책 추진의 아이콘이 되었다. 지난 2019년 초 법제화가 진행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규제샌드박스제도 수요자 체감도조사 결과 일반 기업의 70.7%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대표적인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급격한 제도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해외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사례: 영국과 싱가포르, 일본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지난 2016년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핀테크 부문에 도입한 실증특례제도가 시초다. 전통적인 유럽의 금융허브였던 영국 정부가 급격히 발전하는 핀테크 부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금융산업 발전전략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했다. 일정 주기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고, 3~6개월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영국 금융규제 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실증테스트를 위한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적용 제외가 이루어진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7차 코호트에서는 58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3개 기업이 선정됐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싱가포르 역시 일찍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은 2016년 11월에 핀테크 관련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했으며, 혁신기업과 규제당국의 협의하에 적절히 통제된 샌드박스 상황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기술의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잘 알려진 시장은 Sandbox Express로 구분해 신청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2년부터는 Sandbox Plus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혁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규제샌



드박스제도를 도입했다. 앞선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핀테크 등 부문별로 특화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과 지역 한정형 규제샌드박스를 구분해 공간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샌드박스를 구분하고 있다. 꼭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기존 사업모델의 개선이나 생산공정의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신기술·신사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위험요소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확산 범위와 속도는 한국을 선도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국가로 부르기엔 충분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9년 1월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ICT융합(과기정통부) 및 산업융합(산업부) 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같은 해 4월에 「금융혁신 특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정으로 혁신금융(금융위) 부문과 지역특구(중기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가 추가되었다.

지난 2020년 2월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마트도시(국토부) 부문도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며,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혁신 수단으로서 규제샌드박스의 광범위하고 활발한 운영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포괄적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다양한 산업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이루어지기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중범위의 산업영역으로 구분해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간의 경쟁적 제도 운영을 허용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실적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이 20여 건 남짓의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2년 차인 2021년 2월에 이미 총 410건의 과제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규제샌드박스의 원조 국가인 영국도 아직 200여 건의 추진실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양적 추진성과는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양적 성과가 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 차에 들어선 시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혁신기술 및 상품, 서비스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제도의 운영성과는 실증테스트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통한 혁신산업의 활성화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성과는 제도 적용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에서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실증특례 적용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샌드박스의 적용과 실증테스트 수행이 규제 정비의 결과로 직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특정 규제 걸림돌의 해소가 혁신적 기술이나 사업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개별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실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규제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규제혁신을 위한 실험장이다.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장에 들어오게 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수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사전적인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촉진활동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승인 이전의 예비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 수요관리 측면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수요관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실적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에 대상으로 한 비율이 5% 정

도로 확인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청 주체가 아니더라도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간접적 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전적 관리 외에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으로서 다양한 주체를 통한 협력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 외에 관련 규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당 혁신기술이나 사업모델의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부문 주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R&D 지원활동을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협력기관으로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증특례 이후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가점 항목을 평가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물론 많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나름의 방식으로 혁신성장에 대한 기여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다면 공공기관의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실질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구현될 시점을 맞아, 다양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일자

2021년 11월 18일(목)

■ 장소

JK비즈니스센터 B회의실(서울)

■ 사회

한동숙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 1팀장

■ 토론자

이혁우(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규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수호(주)에스알 사회가치처 상생경영부 부장

이강식(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지원파트 차장)

■ 정리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ISSUE&TALK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한동숙(사회자) 2021년 현재 350개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은 국민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규제’를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모시고 유사행정규제에 관해 논의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현황과 규제개혁에 대해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 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감독자의 역할을 할 경우, 자칫 국민에게 규제기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초기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 같은 유사행정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의 규정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시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비정기적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이슈가 되었으나, 규제개혁의 핵심 이슈가 아닌 금융, 산업안전 등 일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사행정규제의 정확한 현황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혁우 규제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의 제약과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유사행정규제는 그간 명시적인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규제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기준과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규칙이 유사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행정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검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조건과 의무 부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규제와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면 이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발생하지만, 독점권을 보장받은 공공기관은 개선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례 별로 접근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규정과 규칙이 갖는 불합리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는 방송광고 영업, 광고진흥, 공익광

고, 중소기업진흥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고진흥, 공익광고, 중소기업진흥의 경우 업무 수행절차 등에 있어 유사행정규제 성격이 존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광고 영업의 경우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관점에서는 여러 행정절차를 일종의 ‘유사행정규제’로 인식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규제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선과정이 자칫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수호 에스알은 철도운송 사업과 관광사업 등 부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

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편익 향상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 운행률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우려가 있는 요소는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왔으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일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또한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시선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영역이 민간이나 여타 경쟁이 과도한 분야와 비교해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기관의 설립목적인 대국민 운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내부에

어떠한 유사행정규제가 존재하는지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열차 좌석을 공급하는 데 있어 다수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영업제도의 일부나, 고객안전 확보 및 철도안전법 준수를 위해 철도 시설물 내 행동반경을 혹여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분야의 개선을 통해 저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유사행정규제 완화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숙 정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않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공공기관을 통한 유사행정규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행정규제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이며, 공공기관이 주로 시행하는 유사행정규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혁우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1차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절차와 방식,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구분뿐만 아니라, 법정 의무사항(교육, 감독, 안전관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고객응대 기준 및 행정절차, 금전적 부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사행정규제의 유형도 차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신 행정규제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법이 존재하지만, 유사행정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하위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행정규제는 연구자나 규제현장의 실무자 간 규제개혁을 위해 공유하는 개념이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 문헌에서는 ‘quasi-regu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등 다양한 규제대안을 준규제라는 측면에서 quasi-regulation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사행정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기업, NGO 등

유사행정규제의 주체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숙 두 기관에서는 말씀하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뿐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규제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사례들과 더불어 해당 개선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강식 공사는 과거에 광고회사와 신규 거래 시 일종의 허가제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회사 등록절차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는 방송광고 시장의 유일한 공영미디어랩으로서 민간 광고회사의 시장진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광고회사 계약제도와 관련해 전체 매출 대비 광고 관련 매출이 일정 비율(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민간 광고회사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방송광고 청약을 대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특집

공공부문 규제완화

‘대형계약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실물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객들의 시간 낭비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는 비대면 업무 확산에 맞춰 서류제출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해 관련 행정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결국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지원 부서와 실무 영업부서 간 정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최접점 직원들이 전하는 고객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과거에 고속철도 운영사 간 승차권 환급제도가 상이하고, 에스알의

경우 역 창구와 온라인을 구분하는 환급제도로 인해 고객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객 편의와 환급 위약금 부담을 낮추고자 환급 시점 및 장소에 따라 위약금 수수 기준을 더 세분화 운영했지만, 고객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 기존의 11가지 기

준을 6가지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연할인권 사용제한 기준 완화, 명절 기간 SRT 이용실적을 회원 등급 산정 시 포함하는 등 고객 관점에서 제한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전용 역사 임대 사업주의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 연체 시 부담경감을 위한 연체요율 인하 등 지원을 위해 내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성상 적극적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발굴과 이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실 있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의 활성화 역시 역량을 집중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숙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규제개혁도 경제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 과제로 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

관의 유사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신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어떤 규제의 필요성을 시행 주체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관별 규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정부나 민간에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단순한 민원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기업과의 소통창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사행정규제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기관의 내부 관리규정이 아닌 민간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규정과 불합리한 절차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자들 중에도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예상보다 규제개선의 영향과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시점의 유사행정규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행정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초점을 둘 경우, 이들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규제를 추출하고 이들을 유형화한 이후 면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혁우 민간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공

공기관 내 기업성장응답센터가 구축되었으며, 기관 역시 규제혁신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25개 공공기관에 구축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접수된 대부분의 애로사항은 기업활동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은 규제를 적용하는 접점에 있는 까닭에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유사행정규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 규제관

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식 전체 공공기관 대상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유사행정규제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로 연계하거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규제 사례와 개선 노력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저 역시 차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관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함으

로써 동일한 잣대가 아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규제 및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축된 기업

성장응답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숙 오늘 좌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규제현황과 사례, 유형에 대해 논의해보고, 유사행정규제의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절차가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에서 차질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국민에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중앙집권적인 노력 뿐 아니라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항상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분들과 기관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학력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정보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주요 경력

2021~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2018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
2015 서울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
2012 미단시티개발 총괄부사장
2010 C9자산운영 투자운용본부장
홍콩상하이은행(HSBC) 글로벌 기업금융본부 상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유 있는 변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하겠습니다

· 일자: 2021년 11월 11일(목) · 장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부산) · 대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배근호 소장

주택정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으로서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권형택입니다. 『공공경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상하이은행, 미단시티개발, 김포골드라인 대표 등 경제·금융투자 부문과 주택·건설업계를 거친 후 올해 4월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공기관 HUG의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HUG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택보증 전담기관입니다. 사장님은 HUG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 지원

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HUG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과열된 시장 안정화 노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일관된 방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었고, 공급부족 심리에 따른 ‘내 집 마련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주택매수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HUG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점 사업 추진과 ESG 경영 실천으로 구체적인 성과 기대

올해 HUG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성 증진, 업무 시스템 고도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노사 간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영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2·4대책 지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2·4대책에 따라 신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해 보증 신상품 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전세보증 등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은행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증물량 급증을 조직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사제 도입, 차세대 IT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빅데이터 및 프롭테크를 활용한 보증심사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공사의 新경영전략에 ESG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ESG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HUG의 가장 중요한 보증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의 시장개방 논의가 있습니다.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장님은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 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미리 납부한 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것이 주택분양보증제도입니다. 최근 소비자 후생 증가를 이유로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을 하는 이유는 분양계약자 보호인데, 민간보증 사업자가 분양보증시장에 진입하면 수익성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로 보증시장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즉, 분양보증시장 개방 시 민간 보증기관은 저위험 고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 건설사는 주택분양보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현재보다 높은 보증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공급 감소로 소비자후생 역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증사가 크림 스킴(Cream Skimming) 전략을 사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성 추구를 위해 보증 발급을 확대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입니다. 주택은 국민경제와 서민의 주거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경쟁 보증

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의 높은 공공성, 민간 개방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주택분양보증은 지금처럼 공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부의 관리 아래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HUG가 직면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떤 게 있나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최근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 파산위험,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급증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와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둔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HUG의 사장으로서 고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HUG 사업 특성을 반영한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전사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 시장, 유동성 및 운영 리스크를 측정해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체감 리스크를 고려해 위기 단계를 도출합니다. 도출된 위기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청득심으로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

저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의 자세로 임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집단지성을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HUG 노동조합 역시 HUG의 중요 이해관계자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노사화합 선포식을 통해 노동 존중 경영을 실천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함께 공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사제 도입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장님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갈등 해결의 최전선에 계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소통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것, 생명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제 좌우명입니다.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불완전한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집단지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우연히도 저는 수많은 위기 현장과 갈등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브프라임 사태로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현장에서 인간과 자본의 탐욕이 초래한 사회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및 지하철 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첨예한 노사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그 앞에 놓인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취약한 구성원과의 예고된 갈등이라 할 수 있죠.

인류의 기술적 진보는 이미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이라는 간단한 구조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서구 열강이 밀려드는 시기의 구한말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나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힘을 합쳐 사회·경제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런 갈등의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수많은 불면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일이 순조로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를 위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힘들 때 산책하고 등산도 하면서 정신을 맑게 한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게 된 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HUG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국민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HUG 사장으로서 다음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HUG는 1993년 설립 후 주택분양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보증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 당시 HUG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보증의 독점 지위로 인해 소위 어깨에 힘이 들어간 회사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전환 후 주택구입자금 보증을 출시하고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및 임대보증금보증 의무화 등에 따라 개인보증 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HUG는 과거 기업보증 중심의 기관이 아닌,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대부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HUG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HUG 사장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 목표로 보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LH 사태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에 더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공익·사익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 비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자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투명 경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경제』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HUG가 서민 주거안정을 견인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권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납부한 분양대금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시와 상권을 살리는
도시재생금융지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학력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주요 경력

2021~현재 강원랜드 대표이사
2011 행정안전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보
2008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2007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관
2006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강원랜드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강원랜드, 국민의 행복심터로 새로워집니다

• 일자: 2021년 12월 9일(목) • 장소: 서초구 GT타워 강원랜드 서울사무소 • 대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배근호 소장

강원랜드 사상 첫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취임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겪으시고 연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강원랜드를 맡으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대표이사 이삼걸입니다. 『공공경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업부별 업무 보고, 현안 점검, 임직원 간담회, 지역사회 방문,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임했을 당시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할 만큼 영업실적이 악화됐고, 이런 상황이 지역사회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모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임한 만큼, 이를 잘 타개해 나가기 위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그래도 취임하기 전에 그간의 경험을 정리할 공백 기간이 있었던 덕에 경력 연장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은 수요자 관점으로 강원랜드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은 공직사회와 비슷하기도 하고 기업의 특수성도 있어서 이를 잘 융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도전들이 재밌습니다. 의욕도 있고 제게 이런 임무를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올 한 해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랜드에 직접 와보시니 어떠세요? 외부에서 보던 강원랜드와 내부에서 보는 모습이 분명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다릅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도박’, ‘채용비리’, ‘일부 직원의 일탈’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다 보니 사실 취임 전까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며 내부를 들여다보니 직원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경영진의 그릇된 판단과 일부 직원의 일탈 등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

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청렴, 윤리, 준법 같은 가치들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나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자고 자주 말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



다. 혹시 빈 공원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공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면 결국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런 선택이 축적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책임자로서 강원랜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강원랜드에 방문하셔서 우리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처럼 참 힘든 시기에 강원랜드의 선장이 되셔서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를 넘고 계십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처음 적자를 기록한 만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복안이 있는지요?

꽃, 바람, 숲, 빛과 함께하는
국민의 쉼터 강원랜드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강원랜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였을 때와 6,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위기감도 더욱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수요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 수요는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코로나에서만 원인을 찾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존재 목적을 재정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겨울엔 스키장, 여름엔 워터파크, 그리고 골프장과 산책길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꽃, 바람, 숲, 빛과 함께하는 국민 쉼터죠. 누구나 강원랜드에 방문해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복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여름에 동해 해수욕장에 방문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다 좋은데 여름엔 습도가 높아 땀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있는 산간지방은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지금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전엔 동해에서 해수욕하고 맛있는 걸 드신 후, 저녁엔 정선에 오셔서 공연도 보고 산림욕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카지노도 한번 경험해보고 편안한 여가를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다면 고객들이 지금보다 우리 강원랜드를 더 많이 방문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초 2045년까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페특법」)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강원랜드도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비전이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쟁력 강화

「페특법」은 연장됐지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강원랜드의 미래가 밝다고만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임기는 비록 3년에 불과하지만, 저 스스로는 임기가 30년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박’ 이미지에서 탈피해 ‘가족형 복합리조트’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임 후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 쉼터’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원랜드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리조트 콘텐츠 확대, 마케팅 강화,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기업 강원랜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임기를 30년으로 생각하신다는 발상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멀리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노력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전에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보직을 맡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사업의 결과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멀리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면 급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보배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습니다. 당시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여러 과제 중 수목원 건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 전문가와 함께 구상해 준비했지만 바로 준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2018년에 개관했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고군부투했던 시간 끝에 수목원이 개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하는 결정들이 향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늘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큰 기업을 운영한다는 자체만으로 부담이 막중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요?

걷고,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며 지키는 마음의 건강

소식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은 건강 유지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잠시 누워있고 싶어도 밖에 나가 한두 시간 정도 걷는 편입니다. 감사하게도 근무지인 강원랜드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리프레시하기에 참 좋습니다. 주말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는데, 대국 중에 실수도 하지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골치 아픈 일들을 저도 모르게 잊을 정도로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또 되도록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좋은 능력 중 하나가 망각이듯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생각에 얽매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강원랜드 임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진심을
담아내는 소통 추구

코로나 상황으로 임직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직 내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민간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 들어가서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세계 SNS를 활용하라고 조언해주는데 제가 SNS로 임직원 3,700여 명 모두와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의견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으면 정성을 담아 답을 합니다. 또한 제가 가진 생각과 철학을 구성원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구성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좋은 생각이라 해도 잘 전달되지 않으면 소통의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끝으로, 대표이사님이 임기를 마치신 후 지역주민과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폐광지역사회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큰 평가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재임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일을 했다’, ‘참 열심히 하다 갔다’, ‘그냥 세월만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보통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가 터닝포인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지만 강원랜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때 외면하지 않고 인사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산천이 아니라 마음속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추억을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강원랜드가 갖추고 있는 좋은 시설들을 마음 편히 즐겨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지역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폐특법」 초기 연장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백년기업 강원랜드의 기틀을 마련하고 폐광지역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어가는 데 강원랜드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폐광지역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강원랜드가 강원도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씨의 꿈에 생기가 생겼다

대한민국 최초 스노보드 월드컵 금메달 쾌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달립니다!



하이원스키팀
이상호 선수



강원도 내 학교 운동부의 환경 개선 및
폐광지역 스키,골프 종목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는

생생프로젝트 하이원 스포츠 인재육성



잡알리오 앱 개발 및 알리오플러스 콘텐츠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 11월 4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잡알리오 모바일 앱(App)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과 시설·행사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도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는 등 확대 개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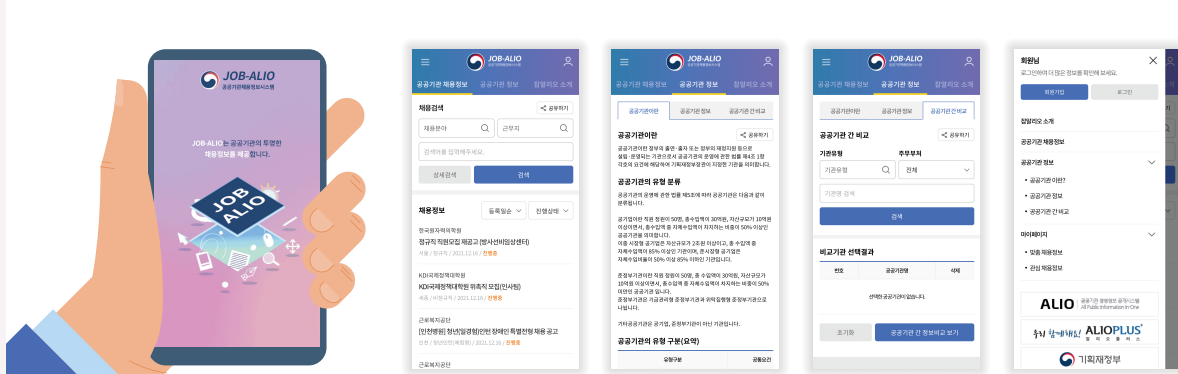
*잡알리오(<https://job.alio.go.kr>)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제공 시스템(2011년~)

*알리오플러스(<http://www.alioplus.go.kr>)
공공기관 시설·행사·사업 정보 포털(2019년~)

잡알리오는 2011년에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으로 월평균 2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2030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설정 시 푸시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를 발송해 주는 만큼 양방향 정보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잡알리오 앱을 통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기관별 채용현황과 평균보수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리오플러스는 2019년에 구축한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으로 매월 9만명 이상이 알리오플러스의 공공기관 시설·행사·사업 정보 등을 검색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잡알리오 모바일 앱 주요 메뉴



1 채용정보 검색
채용분야(금융·경영·보건 등), 근무지, 고용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인턴 등), 채용구분(신입·경력), 기관별 채용정보를 검색해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2 공공기관 정보
350개 공공기관 기능 및 역할 소개

3 공공기관 간 비교
관심 있는 공공기관을 선택해 채용, 보수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및 비교
* 신규 채용, 청년인턴 채용, 신입사원 초임, 직원 평균보수, 직원 수 등

4 맞춤 채용정보
맞춤 정보(분야, 기관, 근무지, 고용형태 등)를 설정하면 해당 채용정보 등록 시 개인에게 알림 기능(푸시, 이메일)

5 관심 채용정보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마이페이지'에서 관심 채용정보로 등록해 두면 언제든지 간편 조회 가능

알리오플러스 주요 신규 콘텐츠



- 1. 기관소개 영상** 개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하는 '기관소개 동영상' 코너를 신설해 공공기관 이해 도모
- 2. 정책 우수사례** 정부 및 국내외 행사 등에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된 자료를 공유해 타 공공기관에 확산
 (사례1) 생활SOC형 연료전지 사업 활성화로 기재부 혁신 우수사례 선정 (동서발전)
 (사례2)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일자리 운영으로 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 주변 명산지** 공공기관 주변 관광지 및 명산지 소개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
 (사례1) 제주 올레트레이 7코스(공무원연금공단)
 (사례2) 인천 아라뱃길(항공안전기술원)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영상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 정책소개 동영상인 '공공정책 지식 in' 과 기관별 역할을 소개하는 '기관소개' 동영상 등 공공기관에 관한 유용한 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또한 정책 우수사례와 주변 명산지 안내 등 홍보콘텐츠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하는 등 국민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지난 10월 1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분기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 집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도 투자계획 및 3분기 집행현황

주요 공공기관들은 금년도 투자규모를 전년보다 3조 3천억 원 증가한 64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3분기까지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4조 8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7월 폭염과 코로나19 4차 확산 등 어려운 집행 여건 중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4분기 중점 점검 분야 및 계획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기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은 4분기에는 4대 분야인 ① 3기 신도시 용지매입비 등 주거안정지원(내), ② 코로나19 극복 가계 정상화 및 기업 재기 지원(캠코), ③ 철도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SOC공기업), ④ 전력, 가스 등 친환경·에너지·안전시설 확충(발전 공기업) 등의 집행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잔여기간 동안 투자집행점검회의 강화, 집행률 제고 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무역업체의 골칫거리, 글로벌 무역사기단 소탕에 한 걸음 다가간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마드리드무역관

부활절 다음 날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 그러나 현실은...

2021년 4월 부활절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날 아침 9시, 마드리드무역관(이하 무역관)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이메일 무역사기에 꼼짝없이 당한 것 같으니 수취 은행에 연락해 신속히 거래정지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내막은 이렇다. 국내기업 A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주 거래하던 중동 바이어 B사와 2021년 3월 초 자동차부품 수출 계약을 맺고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미상의 해커가 A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탈취, 바이어 B사에 A사 계좌가 스페인 소재 은행의 계좌로 변경됐음을 알린 후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을 종용한 것이다.

A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온 B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커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했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후 곧바로 무역사기임을 인지한 A사는 B사에 연락해 주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필 송금일이 스페인 부활절 연휴(4월 1~2일)와 겹치면서 주거래 은행과 송금 은행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이 연휴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바이어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A사는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역관에 곧바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송금이 이루어지고 며칠이 지나버린 터라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무역관은 제일 먼저 해커의 현지 계좌가 개설된 수취 은행에 연락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당연히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은행은 우리가 피해 당사자 또는 계좌주

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고,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이 있어야만 조치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지급유예만 해주어도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절차를 이유로 이를 무시하다니. 일본일초를 닮은 상황에서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무역사기가 왜 이토록 근절되지 않는지, 더불어 범죄집단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법의 빈틈을 악용하고 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무역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사 개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니 일단 경찰(Policia Nacional)과 치안대(Guardia Civil) 산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모두 신고하고 먼저 연락 오는 곳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 후 직접 찾아간 일선 경찰서는 일반 범죄사건 접수만으로도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두어 시간을 기다렸을까, 드디어 차례가 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여 남짓에 불과했다. 글로벌 무역사기임을 언급하자마자 담당 경찰관은 난색을 보이더니, 접수가 어렵다는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결론은 스페인이 피해 발생지가 아니니 본인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 한참을 실랑이하다가 결국은 무력감만 느낀 채 경찰서를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 주재원도 이런데 외지에서 일을 겪는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돈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이제 기댈 곳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순간 공판 주재 경찰영사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라도 알고 있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묘책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경찰영사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영사에게 연락해보니 때마침 유사 사건으로 해당 은행을 접촉한 적이 있고, 관련 부서 책임자를 잘 안다고 했다. 경찰영사는 즉시 해당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자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때마침 은행도 해당 자금의 흐름을 의심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만 주저했더라도 자금이 입금되어 범인들이 인출했을 터.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동시에 스페인 치안대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도 사건이 접수됐다며 연락이 왔다. 진전 없이 이대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급물살을 타는 순간이었다. 이후 무역관 고발에 따른 수사가 정식 개시되면서 하마터면 범죄자의 손으로 들어갈 뻔한 피해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운도 따랐지만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이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메일 사기사건이 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알고 보니 글로벌 범죄조직이 뒤에 있을 줄이야

무역관은 이후 스페인 사이버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 C중위로

종종 연락하며 자문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현지 수사대와 일종의 핫라인이 연결된 셈이다. 그러던 중 올해 10월경 C중위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추적해보니 또 다른 무역사기 시도 흔적이 적지 않게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잠복수사 끝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본거지로 암약 중인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집단이라는 사실까지 파악되었다며 그간의 수사 성과도 전해줬다. 특히 이 집단은 아르헨티나, 대만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기업인을 상대로 이메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더욱 우려스러웠던 것은 한국의 무역업체들에 꾸준히 이메일 해킹을 시도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들의 시도를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본거지까지 확인된 마당에 소탕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영장을 청구할 피해자의 신고가 없다는 것이 수사대의 고민 아닌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 기업 D사의 추가 피해사례가 확인되었고, 스페인 수사대는 함께 이 피해자를 찾아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 작전을 펼쳐보자며 무역관에 역제안을 해왔다. 역습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들을 곧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측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역관과 현지 수사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범죄집단 소탕에 다가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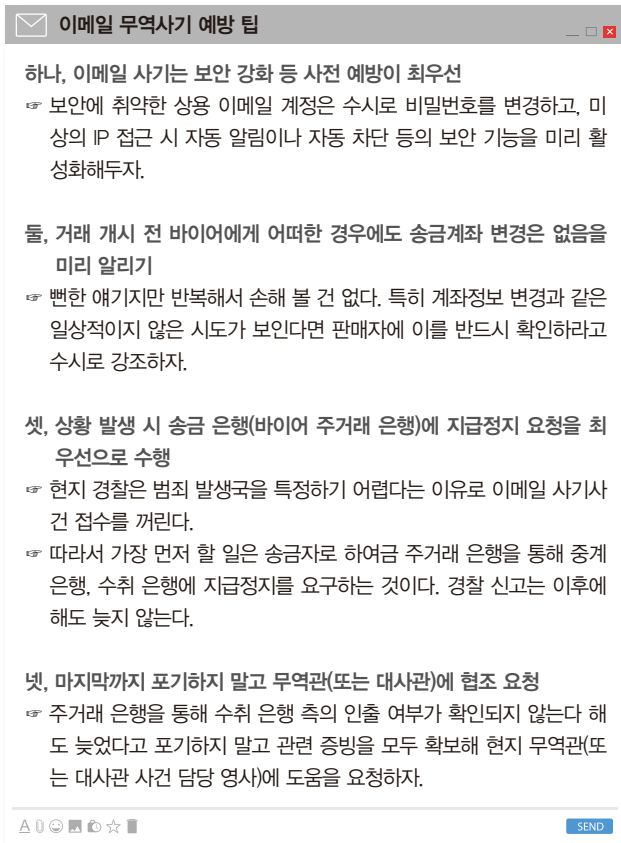
무역관은 수사대가 제공한 수취 은행의 송금 정보만으로 피해기업 D사를 찾기 시작했다. 스페인 수사대는 이미 D사의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곳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무역관 근무 모습



스페인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차였다. 이때 문득 KOTRA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D사의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KOTRA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시장 뉴스라도 찾아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나 D사는 KOTRA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무역 관련 문의를 주로 올리는 해외사업 담당자 연락처까지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었다. KOTRA의 방대한 무역기업 정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연락을 취해보니 D사는 소액 거래였던 나머지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역관은 D사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한편, 무역사기와 관련된 이메일 증빙을 전부 확보하고 형사고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역관과 스페인 수사대가 평소에 관계를 형성해두지 않았더라면 구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스페인 '공조' 작전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무역업체,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인을 괴롭혔던 글로벌 무역사기단의 소탕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아마도 이 글이 지면에 실릴 즈음에는 이와 관련된 희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라도 시도해 보려는 집요함이 결실로 이어지다

사실 공공기관의 해외 주재원이 특정 기업의 피해 구제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고, 특히 피해자를 법적·물리적으로 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 밖의 일로 선을 긋기 십상이다. 게다가 무역사기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미 자금 인출이 끝난 상태라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무역관 직원들은 우리 중소기업인의 피해에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일처럼 백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밀거름되어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는 물론, 글로벌 범죄집단의 소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 국가의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작게나마 이바지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 하겠다.

사이버 무역사기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

우리 기업이 무역사기 피해를 당하면 재외 공관이나 KOTRA 해외무역관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지 법, 절차, 관행의 벽에 막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 사기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요 대책이라 하겠다.○



마드리드무역관 직원들

11월 수출

* 604억 4천만 달러

6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 ✓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
- ✓ 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

〈공공혁신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사례를 모은 '2020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에서 발췌해 정리했다. 여기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발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사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증진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부동산원의 혁신 이야기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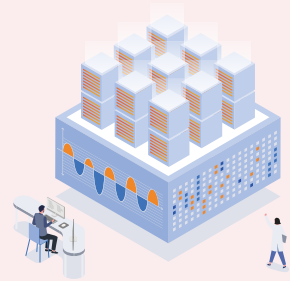
공공혁신 이야기

- 빅데이터 기반 중소벤처 혁신성장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젠 속지 마세요! 토지이상거래 알려줄게요!_한국부동산원

빅데이터 기반 중소벤처 혁신성장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추진 배경

- 데이터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기업 육성 및 정책지원사업 개선, 업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 기관이 생산·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新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대국민 디지털 혁신성장



-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강화 노력
 - 전문가 자문, 선진사례 벤치마킹,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학습조직 연구 등을 통한 빅데이터 요구사항 도출
 -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내부(기업정보/금융/평가 등)·외부(재무/고용/수출/인증 등)에 축적된 23만개 기업, 119만건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지원
 - 빅데이터 요구사항을 토대로 데이터를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획득·분석·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포털 구축
 - * 데이터 통합검색, 분석 및 시각화, 요청 및 공유, 재무·고용 정보 추출,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개방 등 종합적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노력
 - 중소벤처 정책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단순·반복·다량 업무 30개 선정 및 개발,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 추진
 - * ① 설명회/인터뷰 등을 통한 대상 업무 95건 추출 → ② 인공지능 로봇 도입 → ③ 자동화 개발(30개) 및 매뉴얼 배포 → ④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한정적 개발환경 극복을 위해 RPA 맞춤형 환경·인프라 구축 및 업무별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수행
 - * 물리적 인터넷망 연결 및 추가 모듈 개발, BRP 및 프로세스 변경 등

추진 내용

- 新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노력
 - 정책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벤치마킹, 연구용역 수행
 - * 중진공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 유사 서비스 사례 및 데이터 관련 법 조사 및 분석, 수요자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정책 서비스 모델 Pool 구성 및 선정
 - 기관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참여 유도 및 요구사항의 정책 반영 등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 소통 플랫폼 구축
 - * 주요 정책지원사업 지표 및 성과, 사업 참여 정보 제공, 소통 게시판 등

주요 성과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혁신
 - **(혁신성장 선도기업 육성)** 빅데이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 및 8대 선도 산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혁신성장 우수기업 발굴
 - 예비 유니콘 후보 100개사 발굴 → 7개사 육성(기업가치 1천억원↑)
 -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혁신성장 촉진
 - (자금애로 해소) 정책자금 6조 2,900억원 지원 → 매출액 증가율 9.63%, (고용창출) 3만 137명 순증, (수출지원) 2,962개사, 7억 1천만달러 수출 달성
 - **(정책사업 지원 기간 단축)** 기업평가 및 심사시스템을 비대면으로 개선
 - 지원 결정 소요시간 5.8일 단축을 통한 신속행정(10.2일 → 4.4일)
 - 평가 서류·일정 간소화로 고객만족도 제고(91.8점 → 92.0점)
 - **(수요발굴 시간 단축)** 고객 수요를 중소벤처 혁신성장 플랫폼 통해 발굴
 - 고객 수요발굴 업무 소요시간(3일 → 10분)
 - **(데이터 분석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무관한 고난도 분석 가능
 - 데이터 분석 업무 소요시간(70분 → 25분)
- RPA의 전사적 도입을 통한 서비스 혁신 및 업무 생산성 향상
 - **(고객서비스 개선)** 로봇을 통한 데이터 수집 자동화와 이를 활용한 적시적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 * (사례) 기업정보 입력 자동화를 통해 최신정보를 활용한 연계 지원 시행
 - **(편익)** 연간 15억 2천만원(5년간 73억 4천만원), ROI 486%, PBP 2.1개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정책서비스 모델 개발 및 대국민 소통 창구 마련
 - **(서비스 모델 개발)** 수요자 니즈 기반의 정책서비스 모델 3건 개발
 - **(대국민 소통 창구 마련)**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책 참여 유도 서비스 혁신

향후 계획

- 중소기업기업부 산하기관 간 데이터 개방·공유 및 SI기술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용 플랫폼 구축
 - 기업의 금융·비금융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SI를 통해 성장경로에 최적화된 정책금융을 맞춤 지원 → 他 정책 후속 연계로 Scale-Up
 - *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2021년 기관별 사업에 반영
 - * 2022년 ISP 예산 확보 예정
- 빅데이터 수집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RPA 전사 확산
- 빅데이터 기반 정책서비스 모델 3건을 시스템으로 구축, 중소벤처 기업 역량 맞춤형 지원, 성공 창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내·외부 필요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난 40여 년간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수행하면서 30만개사 이상의 누적 고객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보유했으나, 공급자 중심의 집행 위주 사업추진과 고객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과학적 행정 및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보관리 수준이 다소 미흡했다. 지원 사업별 개별관리로 고객 DB의 빅데이터화를 위한 수집 체계가 없었고, 고객정보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 우선순위에 배제되어 고객 접점에서 파악된 유용한 정보가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디지털 업무환경, 디지털 혁신을 통한 K-뉴딜정책 선도, 주 52시간 근무제 및 워라밸 추구 등 인간과 시의 공존 시대로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고 매출액이 저조한 가운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도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정책 목적만을 고려한 실적 위주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가치와 정책 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중진공은 혁신을 준비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혁신을 준비하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중진공의 존재 이유다. 이에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3대 혁신 과제로 기관장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그중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먼저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사업방향을 도출했다. 40년간 30만개 고객 DB를 수집했음에도 단위사업 위주의 분절적이고 기능적인 지원에 그쳤던 데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성과창출 지원체제로 전환을 위해 추진목표 및 방향을 설정했다. 하루아침에 똑딱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고객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 업무 프로세스 연구, 성과분석체계 수립 등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또한 디지털혁신실을 혁신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89개 조직이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더불어 벤치마킹, MOU 등 민간, 공공,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먼저, 빅데이터 관련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컨설팅 16M/M을 투입하고,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며, 품질관리 방안과 빅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역투자빅데이터를 운영하는 KOTRA,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5개 공공기관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00여 곳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0개 청년창업사관학교 CEO 인터뷰를 시행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17개 부서 31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데이터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학습조직을 구성해 연구, 독서토론, 코칭 등을 이어가며 138개 빅데이터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데이터를 쉽게 획득·공유·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소통 창구 필요, 시각화, 통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으로 정책 개선, 내·외부 데이터 확충 필요, 사업 참여기업 성과분석을 위한 재무제표, 고용정보 등 제공, 데이터 단순 제공, 분석, 시각화, 외부 연계 등이 있었다.

또한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우량기업을 추출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매핑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유망기업 소싱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는 우선 원격 인터뷰나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물리적 인터넷망 연결 및 추가 모듈 개발,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홍보 포스터 제작, 안내메일 발송, 자문 시행 등 협업 마인드와 신속한 대처로 유연하게 극복했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

[그림 1] 빅데이터 포털 개념도



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내부(기업정보·금융·평가 등) 및 외부(재무·고용·수출·인증 등)에 축적된 23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119만건에 달하는 보유 데이터를 DB화했으며,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획득·분석·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했다. 내외부 빅데이터를 수집·융합하고, 이를 유망기업 소싱, 고객센터 개선, 인공지능 연계, 정책개선 등에 활용했다. 이를 서비스화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지원,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공유·개방·추출하는 빅데이터 포털, 대국민 데이터 소통을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등을 구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일반 국민, 유관 기관, 내부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빅데이터 포털의 세부 기능으로는 데이터 통합검색,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개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정보 및 데이터를 포털에서 검색할 때 검색엔진·자연어 검색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용자 주도적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산작업 의뢰 없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 업무에 드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무관한 고난도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기관 전체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예비 유니콘 후보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그중 7개사를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정책자금 6조 2,900억원 지원으로 해당 기업 매출액을 10% 가까이 증가시키고,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융합 수출지원으로 2,962개사 7억 1천만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기업평가로 지원 기간을 5.8일 단축해, 중소벤처기업의 급한 마음을 달래졌으며, 수요발굴 및 데이터 분석을 효율화해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에 앞장섰다. 또한 빅데이터와 특허를 등록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고성능과 다참여 사업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사원에게

중진공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시스템을 도입했다. RPA는 단순·반복·다량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먼저 설명회 및 인터뷰를 통해 95건의 대상 업무를 추출한 후 인터뷰와 상세 분석을 통해 최종 30개 업무를 선정해 개발했다. 또한 한정적 개발환경 극복을 위해 물리적 인터넷망 연결 및 추가 모듈 개발 등 RPA 맞춤형 환경·인프라 구축 및 업무별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성공적 디지털 전환 수행을 지원했으며, 총 8대의 로봇을 도입해 30개 업무를 직원들 대신 자동으로 처리하게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RPA 도입 이전에는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내 포털, 국세청 등 6개의 시스템에 접속해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15종의 서류와 기업철을 출력하는 데 건당 25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직원이 로봇에게

심사 대상을 이메일로 보내면 로봇이 모든 출력물을 PDF 파일 1개로 정리해 다시 직원에게 보내고, 이를 직원이 출력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함으로써 소요시간이 건당 3분으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행정망과 리얼타임 등 4개 시스템에서 11종의 서류를 출력하는 데 20분이 소요됐지만, RPA를 통해 2분으로 줄었다. 연체정보 등록 및 대출정보 이메일 발송 업무와 직접대출 상환안내문 발송 업무는 RPA가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30개 업무 기준으로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연간 총 3만 8,504시간이 소요됐으나, RPA 도입 이후에는 소요시간이 1,980시간으로 줄어 연간 3만 6,524시간, 비율로는 95%의 시간을 절감하게 됐다. 투입 인력으로는 20명이 할 업무량을 관리자 1명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만 연간 8억 8천만원으로 예상된다. RPA 도입에 투자한 비용 및 효과 등을 고려한 편익은 연간 15억 2천만원으로 5년간 73억 4천만원이 기대되며, ROI는 486%, PBP는 2.1개월에 달한다.

인적·비용적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창의시간도 확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

빅데이터로 소통하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분석해 활용 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신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자 중진공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를 연계한 수요자 니즈 기반의 정책서비스 모델 3건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공모로 90건의 제안을 받아 담당자 11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민연금공단, ㈜더존비즈온, BANK샐러드로 유명한 ㈜레이니스트 등의 기업을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또한 교수 및 CEO 등 전문가 자문을 4회 받고, 서강대학교에 의뢰해 정책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첫 번째는 성장 잠재력 포트폴리오 분석모델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의 역량 우위를 파악하고 역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규모·연도별 경쟁사 및 유사 기업 비교로 경쟁력을 확인하고 수요자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서 혁신

〈표〉 RPA 적용 주요 사례

업무명	기존(As-Is)	개선(To-Be)
정책자금 융자신청 기업철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25분(1건) / 7,292시간(년) • (방법) 전자 포털, 국세청, 리얼타임 등 6개 시스템 접속 → 15종 서류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3분(건수 무관) • (방법) 로봇에게 이메일로 요청 → 기업당 1개 PDF 화신
사후관리 관련 서류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20분(1건) / 2,500시간(년) • (방법) 행정망, 리얼타임 등 4개 시스템 접속 → 11종 서류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2분(건수 무관) • (방법) 로봇에게 이메일로 요청 → 기업당 1개 PDF 화신
연체등록 대출정보 이메일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60분(1회) / 240시간(년) • (방법) 연체정보등록 검색 → 업체 필터링 → 담당자 이메일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자동처리 • (방법) 로봇이 매일 자동 검색 및 필터링 → 담당자 이메일 발송
직접대출 상환안내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5분(1건) / 1,500시간(년) • (방법) 연체기간 80일, 90일 기업 검색 → 기업별 정보작성·SMS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자동처리 • (방법) 로봇이 자동 필터링 → 기업담당자에게 직접 발송

[그림 2] 국민소통 플랫폼: 중진공e한눈에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정책서비스 모델은 성공창업 내비게이션이다. 창업기업의 생존 및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성공 패턴 제공과 지출 비교를 통해 창업기업 현황 분석 및 성공 패턴 비교로 성공 전략을 수립 하며, 기업 지출 진단으로 적재적소의 지출 의사결정 지원을 기 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숙도 진단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 털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디지털 방향성을 제시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생태계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 데이터 확보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 개발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통을 위해 대 국민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관련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했다.

더 나은 미래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간 데이터 개방·공유 및 시기

술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금융·비금융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시를 통해 성장 경로에 최적화된 정책금융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他정책 후속 연 계로 Scale-Up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주요 기능은 비대면 기 반 정책금융 다이렉트 신청 연결, 빅데이터 활용 기업분석 정보 제공, 정책지원 이후 진단을 통한 성과관리(정책 연계 등) 등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 수집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RPA를 전사적 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기술 검증과 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면, 2021년에는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 직원 내 재화 등을 통한 조직구성 및 내재화를, 2022년에는 부서별로 자 체 개발하고 전사 업무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빅데이터 기반 정책서비스 모델 3건을 시스템으로 구축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역량 맞춤형 지원, 성공 창업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젠 속지 마세요! 토지이상거래 알려줄게요!

추진 배경

- (목표)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 제공을 통한 기획부동산(토지)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배경)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 토지를 다양한 개발 호재로 포장하고 고가 매도해 부당이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지속 발생
 - 체계적인 대처방안 부재와 사기수법 진화로 피해 규모 대형화*
 - * "산곡대기 그린벨트에 몰린 3,000명... '기획부동산' 유혹"(2019. 6. 7., JTBC)



추진 내용

- (방안)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구현 및 공공(행정당국) 대상 제공 추진
 - ①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분석 ②특성 데이터 구축 ③이상거래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④시각화 정보서비스 구축으로 고도화된 서비스 구현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로 추정되는 필지의 지번, 계약면적, 이용 상황 등 상세정보 제공
 - 행정당국은 제공된 정보를 기획부동산 사기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법·제도 개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참여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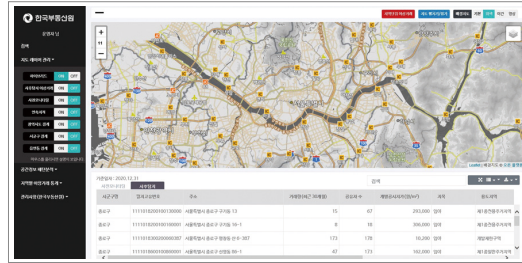
기관명	주요 역할	기여도(%)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	서비스 개발 및 운영	60
국토교통부, 지자체	실태조사 정보 제공, 사기 특성 자문	10
카이스트, 데이터솔루션	모델링 산출결과 적정성 검토 등	10
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자문	5
하우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토지이용규제 등급 분류 등	10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 등 법률·세무 자문	5

* 한국부동산원(주관기관)은 이상거래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및 사업총괄 수행, 아이씨티웨이(참여기관)는 시각화 서비스 개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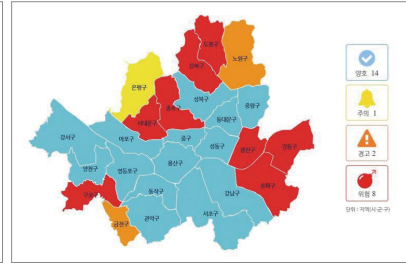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빅데이터 · AI 기술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사용자 환경〉



필지수준 상세정보 제공



지역수준 위험경보 정보 제공

□ 기대효과

- (대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부동산 시장관리 · 소비자보호 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
- (대외) 국내 최초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 · 운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파급효과) 금융권 사기거래탐지기법(Fraud Detection System)의 부동산 실무 도입으로 부동산 신산업 분야 유사 서비스 확산 촉진

협업 전(Before)	협업 후(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의 진화, 피해 규모의 대형화에도 대처방안 부재 • 부동산 DB가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체계적 분석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제공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공공 비즈니스 모델 구현

주요 성과

□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서비스 지역범위 확대(경기 일부 → 수도권 및 세종 전역)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직관성 및 서비스 활용성 제고
- * 공간정보 패턴분석(Hot · Cold Spot), 거래량 통계 · 뉴스기사 제공 등 기능 개발

향후 계획

□ 공공(국토부, 광역지자체) 대상 정보 공유 및 서비스 활용도 제고

- 지속적인 환류 및 추가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추진(2021. 12.)
- * 중앙부처(국토부) 및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세종 등) 대상 산출결과 제공

**부동산 시장의 피싱(phishing), 기획부동산과 토지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나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했다’는 소식은 꽤 오래전부터 언론이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회현상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투자 해두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지분을 쪼개어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부동산업자를 뜻한다.

‘토지이상거래’는 무엇인가요?

‘기획부동산’을 포함해 허위광고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기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 등기 및 실거래가 신고된 후에야 사기 피해로 나타난다. 여러 형태의 사기수법이 있지만, 사기행위로 드러난 거래들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부동산 사기거래로 실거래가 신고가 된 데이터들을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특정 지역에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고, 공동소유자의 수도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투자자를 모집해 등기가 완료돼야 사기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사기행위자들은 특정한 패턴을 가진 거래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토지거래를 ‘토지이상거래’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토지이상거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지하철 또는 도로 건설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로 포장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생태계 교란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특징, 거래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이상거래는 일반적으로 ① ‘○○경매’, ‘××에셋’, ‘□□정보’ 등의 상호를 가진 법인이 매도자이며, ②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주변 개발계획을 이용해 사진과 도면으

로 잘 포장하고, ③ 전화 영업사원을 고용해 판매망을 구축한 후, ④ 해당 토지의 판매가 끝나면 법인을 폐업하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이로 인해 누군가는 자녀들에게 물려 줄 기대감으로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등기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사기행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온전히 부담을 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기획부동산 사기의 특징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기획부동산 사기 Self 체크리스트

토지 매도자가 법인이고, '00경매, 00에셋, 00옥션' 등의 상호를 사용하나요?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받았습니까?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직접 지분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를 찾아보셨습니까?'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맹지, 임야, 논 밭 등을 공유지분으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없이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권유받았습니까?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진화하는 사기수법, 커지는 피해 규모

과거의 기획부동산은 무작위로 전화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부동산을 살 것을 단순히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이나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호재가 있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이득을 챙긴 후 떠넘기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사기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는 오래된 얘기인데 왜 사람들은 사기에 넘어가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피해사례나 예방책이 많이 알려졌지만 초기에만 해도 성별, 나이, 직업 등과 관계없이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다.

최근의 기획부동산도 마케팅 방법을 바꾸어 ‘노후대비’ 및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불안심리를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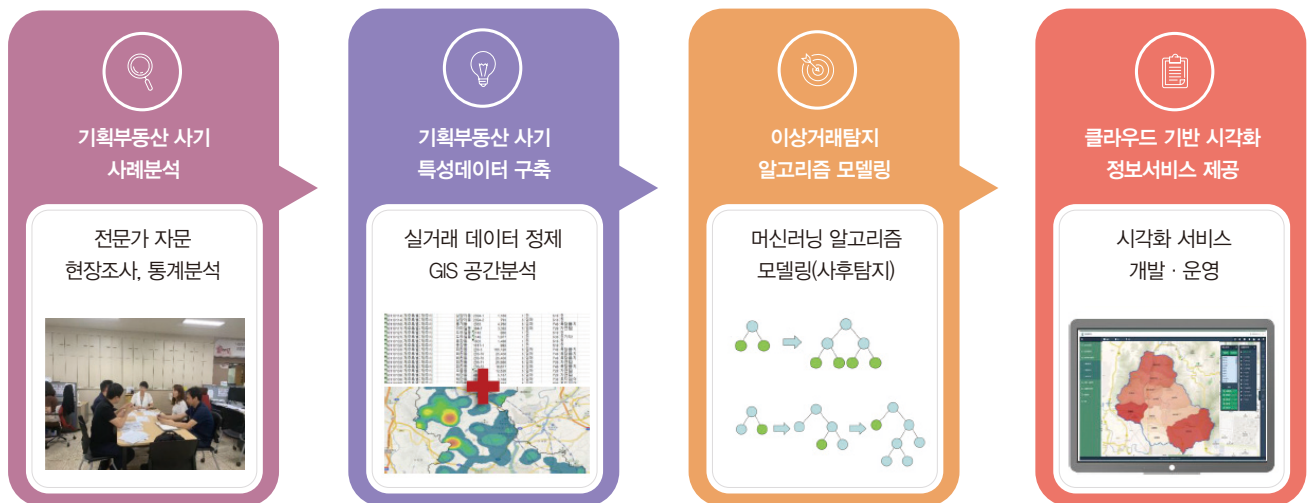
[그림 2]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언론 보도 내용



하고, 통화 연습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방식의 영업전략을 교육하는 등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다단계 형식의 판매업체 영업방식을 모방해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좋은 근로조건을 내걸고 영업직원을 모집한 후, 합법적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해 직원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진화한 사기수법에 속아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했다가 사기인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는 사례가 최근에도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 현장을 실제로 가보면 그린벨트처럼 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거나, 진입 도로도 없고 개설할 수도 없는 곳임에도 등기부등본상에 수천명의 소유자가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곳은 사기 피해 규모가 3천여 명을 넘어서고, 피해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림 3]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모든 부동산 거래가 기록되는 RTMS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에 신고된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RTMS로 전달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든 혹은 이상거래든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 그리고 거래 흔적의 총착점은 RTMS이다. 그리고 이상 여부를 가장 먼저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이다.

이에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빅데이터연구부, 국내 최초 토지거래위험 경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연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연구부에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빅데이터연구부는 먼저 기획부동산 사기 형태를 분석하고 사기 사례의 실증 데이터를 구축해 토지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모델링을 완성한 후, GIS를 활용해 실거래 신고 데이터가 입력되면 지도에 이상거래 패턴을 가진 지역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개발 프로세스를 구상했다.

우문협답(愚問協答), 우리의 문제는 협업에 답이 있다!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협업 체계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데이터의 집합체인 RTMS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가 발생한 곳을 알려주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사기 유형이 있는지, 사기 피해 지역은 어디인지, 법률상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 내용이 기술적으로 정확도가 높고 안정적인지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였다. 모든 개발 프로세스마다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경찰청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 패턴 등 범죄정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지자체에서 수행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해 기획부동산 사기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은 RTMS의 토지실거래 데이터를 정제해 GIS 공간분석을 시행하고, 이상거래 알고리즘을 찾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토지특성 데이터 적합 머신러닝

알고리즘 탐색 및 모델링을 하고, 위험경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KAIST에 기술 자문을 받아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산재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부족한 전문 분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협업’이었다. 우문협답, 우리의 문제는 협업에 답이 있었다!

알고리즘 · 시각화 서비스 고도화, 보기 좋은 서비스가 사기거래 잡기도 좋다!

2019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2020년에는 서비스 운영범위를 개발사업 이슈가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 67개 지자체로 늘려 시범과제에서 실증과제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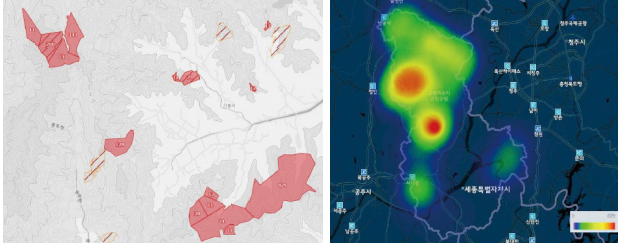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상거래 알람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토지이상거래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함으로써 이상거래 발생징후가 있는 지역을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상황에 활용된다면 사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확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고도화해 공간정보 패턴분석으로 토지거래 핫스팟, 콜드스팟 등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기능을 추가했고, 토지이상거래로 추정되는 토지의 상세정보(지번 · 계약면적 · 이용 상황 등)를 필지 단위까지 제공할 수

[그림 4]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협업 체계 및 역할



[그림 5] 사전모니터링·사후탐지 기능 및 Spot 분석 기능



있을 정도의 정교함을 더했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어 정부와 지자체에 분석정보를 공유하면 사기 피해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예방효과는 물론, 제도개선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2년 연속 선정

지난 2020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의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공공이익 실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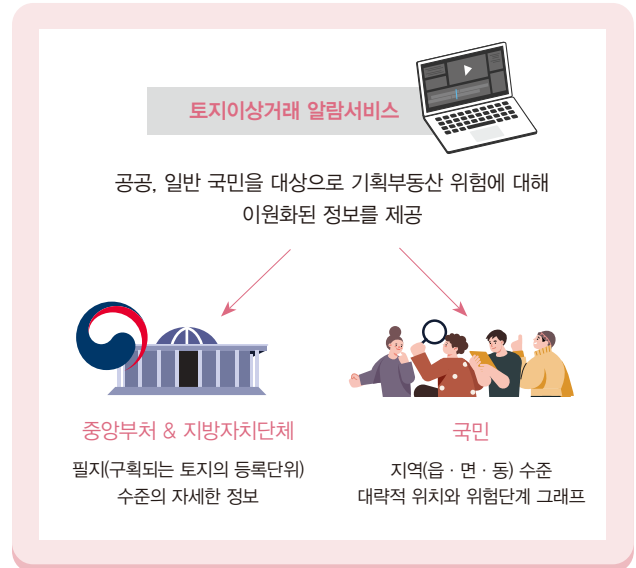
국민 재산권 안전 지키미, 공공 프롭테크의 탄생

프롭테크(propotech)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부동산 자산을 뜻하는 ‘property’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를 결합한 단어다. 현재 프롭테크 산업은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간설계,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ICT 기술을 이미 부동산 정책에 활용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또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또 하나의 공공 프롭테크 걸작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국민에게는 이상거래 발생 지역(읍·면·동) 및 위험단계 그래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를 통해

[그림 6]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의 역할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토지거래 시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착한 소비자들의 수호자, 한국부동산원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문제이지만 사적 재산권 행사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는 정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현재도 법적으로 사기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할 시점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통한 위험경보 정보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공유하고 토지이상거래 위험산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969년부터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창립 51년 만에 부동산 전방위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맞이하는 원년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착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공기관 잡앤톡(Job&Talk)



이동근
국립암센터 사무국 인사상생팀 파트장

인사 담당자 Q&A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사상생팀 이동근 파트장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보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경제』를 통해 국립암센터의 채용 관련 정보를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긴밀하게 협력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암전문기관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암 관리, 암 연구, 암 진료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개원한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암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암 생존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암센터는 암 치료를 선도하고 표준을 제시하며, 희귀난치암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암빅데이터센터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 암 연구 선도기관으로 'K-암관리사업'과 'K-암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인류의 암 극복에 이바지하는 세계 최고의 국립암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어떤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암 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면역세포치료 개발,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 희귀암 연구 및 방사선치료 연구 추진과 암 연구·진료·정책이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혁신적 암 연구, 암 관련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융·복합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분야에서는 선제적 암 진료 모델 제시 및 최고 수준의 암 치료 제공을 위해 희귀난치암 진료 및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암 및 호스피스 진료 확대 등 암 진료의 공공성 강화와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지체계를 구축·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암관리사업에서는 국가 정책 기획과 연구·사업 수행은 물론이고 국가암빅데이터에 기반한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글로벌 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협력교육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암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참여를 통해 암 분야의 국제협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3분기 정기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결원이 발생한 정규직 직렬에 대한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매 분기 정기 공채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립암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및 국가 직무능력표준(이하 NCS)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채용을 모든 모집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력·성별·지역 등에 제한 없이 오로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면허증(자격증)이 필수인 직무에 한해서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 → 필기전형 및 조직적합성검사(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직렬 및 업무 특성에

따라 필기전형 및 조직적합성 검사가 생략되거나, 면접전형이 두 차례로 나누어 시행되기도 합니다. 전문직(의사·연구원·교원)의 경우, 별도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국립암센터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국립암센터 청년인턴 경력자는 전형 별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합니다.

입사지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블라인드 및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므로 지원하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업무경력,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을 토대로 지원자의 경력 및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원 단계에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지원자의 학력, 성별, 나이, 출신지, 가족사항 등은 일체 기재하거나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기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에서는 직렬별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은 채용공고 시 직



무기술서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상 필요한 직렬에 한해 시행하며, 시험문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균 50문항을 출제합니다.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전형은 구조화된 역량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대다 방식으로 상황면접 및 경험면접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발표면접을 추가합니다. 상황면접은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한 결정사항을 묻는 형식이며, 경험면접은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발표면접은 해당 직무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역량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지원자들이 면접전형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 시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은 채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는 만큼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직무와 관련한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담당자로서 국립암센터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암센터는 암 관련 연구 및 진료, 국가암관리사업,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 암과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암 중앙기관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진료인력뿐 아니라 연구인력 및 교원,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 및 기술직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무엇보다 직원이 행복해야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직원과 기관이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직원행복프로젝트 등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립암센터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사명감과 본인의 행복 및 자아실현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국립암센터의 동료이자 구성원이 되어 국립암센터가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잡앤티톡(Job&Talk)



한국원자력의학원



이병주
한국원자력의학원 총무인사팀장

인사 담당자 Q&A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에서 인사·급여·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인사팀 이병주 팀장입니다. 2006년에 입사한 후 주로 정책 수립, 전략기획, 성과관리,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총무인사팀장으로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의학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비합격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의학원의 간단한 소개와 채용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좀 생소한데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의학원은 2023년에 설립 60년을 맞이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합 학술연구기관이자 첨단 의료기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본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원자력병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가리신약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부산시 기장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방사능방재체계의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원은 연구·의료·방사선비상진료·신약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세계 유일무이의 기관입니다. 본원에 입사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전문가로 성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입사 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의학원은 10개 내외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과 의학·의학연구 및 의료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는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기술직, 간호조무직, 일반업무직, 전공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첨단 의·생명 연구를 선도하고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종별, 부서별로 채용을 진행하며, 면허 또는 전공 자격이 필요한 직종 외 직원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원의 채용 절차가 궁금해요.

연 1회 시행하는 간호사 정기 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시 채용을 합니다. 퇴직 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필기시험 또는 논문발표), 3차 전형(최종면접)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무기계약직은 2차 전형을 실무면접으로, 별정직(기간제)은 2차 전형을 최종면접으로 시행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원의 채용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응시원서는 의학원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응시자는 해당 공고별 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증, 면허증, 어학성적, 교육 및 경력 등을 기재합니다. 자기소개서는 5가지 항목에 맞추어 각각 2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1차 전형(서류전형)은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채용 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합니다. 2차 전형(필기시험)은 직종별로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과 유사한 과목의 문제를 출제하고, 채용 인원의 3배 수 내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다만, 의무직 및 약무직은 필기전형을 생략하고, 연구직은 논문심사 후 3차 전형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3차 전형(최종면접)은 지원자의 기본자세, 이해판단력 및 성실성, 발표력, 일반상식, 목표의식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의학원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전형별 평가위원의 심사표를 현장에서 밀봉 및 날인해 감사실에 보관하고, 감사실 입회하에 개봉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채용서류를 관리합니다.

의학원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학원은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 편견 없는 채용을 위해 응시

자의 용모, 성별, 나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특히 응시자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원서 단계부터 위의 항목을 수집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응시자가 이를 위반하고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직 등 전문 분야의 경우, 채용공고에 표기한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항목별 200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분량 내에서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증,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 등이 필수조건일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기시험(논문심사)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필기시험은 직종별로 출제 과목이 상이하므로 채용공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취득 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문제를 출제합니다. 필기시험은 성실히 준비한다면 과락 점수(60점) 이상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 출제하고 있습니다.

논문심사는 연구논문 체계, 우수성, 기여도, 연구소양, 발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응시자는 채용공고에 제시된 업무 내용, 전공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을 요약해 발표합니다. 발표 시간은 응시자별로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5분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전형 준비에 왕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간결함, 솔직함, 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결한 답변을 위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응시자의 생각을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길어질수록 응시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한 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비전, 미션, 언론보도, 주요사업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 분야에 대한 포부를 준비해 상황에 따라 답변하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원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가 많습니다. 고사장, 면접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서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때때로 눈물을 보이는 응시자를 보면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마스크 너머의 열정 가득한 눈망울을 보면 제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의학원은 지난 50여 년간 최고의 암 전문병원으로, 그리고 최초의 방사선의학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방사선의학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참 뒤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선배들이 이어온 50년 역사를 자부심으로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유능한 예비합격자 여러분이 의학원의 역사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의학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흑시라도 있을 불공정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유능한 인재를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학원 100년 역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소개

핵심미션

첨단 의생명 연구를 선도하는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에 기여한다.

추진전략

첨단 의생명 연구를 통한
국민건강 생활 증진



방사선 의료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송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전 국민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능력을 자격시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구직자를 국내외 기업에 알선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과 교류를 통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숙련기술 전수 지원과 우대 품토 조성,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 국내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HR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신 동기가 궁금해요.

학창 시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공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시험 업무만 담당하는 줄 알았던 공단이 근로자 능력개발과 청년 취업지원, 숙련기술 전수, 이주 노동자 도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내 경제 및 HR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단에 입사하기 전 많은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와 필기시험에는 종종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내가 회사 CEO라면 어떤 인재를 뽑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모든 사업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관심 있던 자격시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단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를 통해 쌓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단 입사 시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정리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필한 점이 입사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하시는 직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입사 후 전문자격국과 인재개발부를 거쳐 현재는 홍보실에서 광고홍보 업무 및 캐릭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옥외,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광고 쪽에 힘이 실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사람과 달리 스캔들 같은 위험 요소가 적어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도구인 만큼 최근 많은 기관에 캐릭터 마케팅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대표 캐릭터는 '이루미와 해냄이'인데, 이름 그대로 사람들의 꿈을 이루고 모든 일을 해내게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루미와 해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씀해주세요.

요즘 ESG 경영이 대세인 만큼 홍보 직무에도 ESG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ESG는 Empathize(공감), Sense(감각), Get along with(소통)입니다. 'Empathize(공감)'는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했을 때 고객이 콘텐츠에 공감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고객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홍보이기 때문입니다.

'Sense(감각)'는 홍보콘텐츠 배포 또는 이벤트 등 개최와 관련해 디자인과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 눈(시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70% 이상이기에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며, 적시성이 없는 홍보는 과거의 가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t along with(소통)'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그리고 원만한 관계 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보의 본 목적(Public Relation)이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호응을 이끌어내 더 나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시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업무라 타 부서와 달리 언론기사, 영상, 이미지 등을 많이 다루고 접한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읽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은 홍보 업무가 규율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주관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의 안전망이 취약하고, 담당자 스스로 개척하고 짚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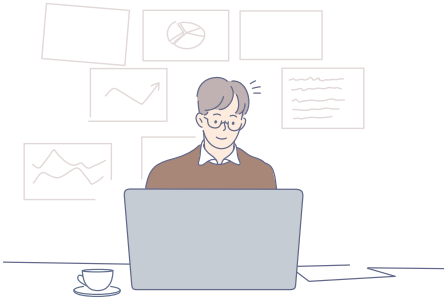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NC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가 특별한 스펙으로 취급받으면서 사교육을 부추린다고도 하지만, NCS는 단순히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의사소통능력과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전공지식 등 일상과 학습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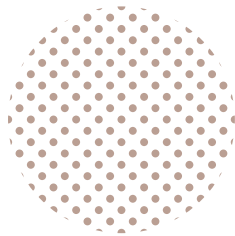
NCS 시험에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NCS 홈페이지(www.ncs.go.kr)에 방문해 직무별 예시 문제를 둘러보길 권합니다. 출제자 또는 회사가 어떤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지, 출제 패턴은 어떤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제를 막론하고 언론 기사를 많이 접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 언어능력 향상과 지문 속독으로 필기시험에 대응할 수 있으며, 회사 관련 뉴스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면접과 실무에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이 든다고 해서 묻지마 취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힘이 들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주변이 시켜서 하는 취업이 아닌, 내가 원해서 하는 취업일 때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취업을 하시길 바라며, 그게 우리 공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때요?



김병찬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대리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으로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용정보 및 직업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취업 정보사이트 워크넷과 고용보험 전산망, 직업훈련포털 HRD-Net 등의 국가고용 정보망을 운영합니다.

현재 담당하시는 직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국가고용정보망 중 하나인 워크넷의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직 직원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워크넷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오픈 API로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자를 위한 온라인 구직신청, 워크넷 입사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신청, 인재정보 검색 등의 채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The Work AI 서비스'를 도입해 구직자가 직접 일 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원하신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던 중 담당 선생님이 한국고용정보원 체험형 인턴을 추천해주신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워크넷처럼 규모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났고, 워크넷 운영을 접하면서 전산 업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때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에 도전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요?

일단 많이 지원해본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회사에 지원했던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 지원해서 입사 전형에 부딪혀보고, 불합격도 해보면서 저 자신과 지원 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수한 도전을 통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반대로 회사 관점에서 과연 내가 회사에 맞는 인재상인지를 확인해봤던 것이 취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알려주
세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웹 개발 경험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HTML, 자
바스크립트 같은 기본 웹
개발언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공 웹사이트가 자바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스프링 프레임워크, JSTL, MyBatis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이를 활용해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준비생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개선의견을 받을 때는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잡코리아처럼 간편하면 더 좋을 텐데”, “자소설닷컴처럼 한눈에 보이면 더 좋을 텐데” 같은 의견을 들 때는 담당자로서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러한 의견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에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현직자 인터뷰 글을 작성하기 전에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이 한국고용정보원 대표 유튜브에 게시됐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남는 것은 사진과 추억인 것처럼 나중에 회사생활을 돌이켜 볼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과 지금의 현직자 인터뷰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은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는 달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에 생각(또는 기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회사생활을 떠올릴 때 소위 말하는 ‘디지털노마드’의 삶을 꿈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을 땐 집이나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일단 9 to 6 회사생활을 합니다. 저처럼 전산직의 로망을 꿈꾸셨던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운 이야기 일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명석한 인재보다는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맡은 일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입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필수 요건들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한국사 자격증, 전공 기사 자격증 그리고 영어 성적이 공공기관이 대체로 요구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꾸준한 직무 경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교 수업 프로젝트부터 프로그래밍 동아리, 전산직 인턴으로 이어지는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묘사해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해왔고 그래서 잘 해낼 수 있다고 어필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입사를 위해 직무 경험과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회사라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인간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취업 준비에 열심히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한 뒤에 시작할 회사생활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지 말고, 가끔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사람이 되는 고민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선우태용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연구원

※ 이 글은 '2020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채용 부문 수상작을 전제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 1층에 있는 가게인데, 계단 몇 개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장애가 없었다면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만, 휠체어에 앉아 바라본 세상은 늘 멀리, 그리고 넘지 못할 담벼락 위에 있는 곳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남들보다 뛰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학사를 두 번, 석사를 두 번 하게 된 것은 그나마 그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부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엔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었다. 그렇게 학위는 늘어났지만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언제쯤이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석사가 끝났을 무렵, 작은 잡지사예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취직했다.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취재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취재 전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투고 받은 글을 교정·교열하는 업무를 맡았다. 성과도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지만, 회사는 이동의 어려움을 문제 삼아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그냥 멍하게 있을 수는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니 분당 200원 받는 자막작성 알바를 하기도 했고, 장당 만원 받는 영한번역 알바도 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 이왕 번역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했다. 통역은 업무 특성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번역에만 집중했다. 방학마다 동기들이 통역 실습을 나가는 동안 나는 책을 한 권씩 번역했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기계번역이 대세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 100만원쯤 하는 CAT 프로그램(Computer-assisted Translation)도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법학 강의를 들었다. 사이버대학으로 학사편입을 해 2~3학년 전공과목을 중점으로 들었고, 장애인 장학금 덕분에 학비도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사실 통번역대학원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하거나, 개인이 학습해야 할 분량이 꽤 많아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막상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자 마음이 심란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스스로 되뇌었다. 대학원 동기들은 통·번역사라는 전문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졸업식 며칠 후, 대학원 교수님이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번역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을 보내 주셨다. 처음엔 그 월급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 어머니라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월급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장애인 제한 채용에 식품 계열 전공자 우대까지 있는 통·번역직은 처음 본다라고 하시며 그곳은 나의 자리라고 하셨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부모님은 중간에 그만둬도 좋으니 경험 삼아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셨다.

사실 시험은 쉬웠다. 학부에서 생명과학과 식품과학을 복수 전공했기에 익숙한 내용이었고, 전임자가 나간 지 10개월이나 되었기에 전공자 출신인 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은 나를 뽑지 않으려 했다고 들었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었지만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기에 채용을 망설였고, 담당 주무관이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뽑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식약처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내가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저곳 고쳐주었다. 새로 배우는 업무들, 처음 겪는 조직생활, 실수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참 감사했다. 다만 통·번역 업무에는 번역뿐 아니라 통역도 있어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지만 가지 못하고 옆 사무실 다른 통·번역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 이후 다음 직장은 번역만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번역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리가 올라왔다.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퇴근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3~4시간씩 국문과 영문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읽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놀랍게도 필기에 합격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몇 달을 정말 정신없이 준비했기에 상실감이 꽤 컸다.

오전에 불합격 소식을 듣고 오후에 번역 업무를 하다가 인용해야 할 법령이 있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무슨 조화였는지 무심코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눌렀는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법령번역직이 있었다. 원서 마감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 오전엔 불합격 소식을 전하더니 오

후엔 재도전하겠다는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는지 참 신기했다고 하셨다.

법원도서관과 달리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기관이라서 번역 외에도 NCS 시험을 본다고 했다. 다행히 번역시험은 판결문을 번역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까지 며칠 동안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었다. 실제 시험에서도 번역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NCS 시험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왔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던 차에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고 했던 법원도서관과 달리 법제연구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때문인지 내가 가진 역량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4개의 학위(이학사·목회학석사·통번역학석사·법학사)를 모두 높게 쳐주었다. 실제로 번역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배경지식은 무엇보다도 큰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3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었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 아닌 일반인 35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해 채용된 것이다. 오히려 같은 능력이었다면 내가 아닌 건강한 다른 사람을 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기뻐고 그간의 수고를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입사 후 우리 번역센터는 트라도스라는 CAT 프로그램을 도입해 더 효율적인 번역 시스템을 구축했다.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다닐 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기에 신입이지만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누가 길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늘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다. 내가 말버릇처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장애채용의 날개를 달다!



이주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내과심사부 5급대리

※ 이 글은 '2020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채용 부문 수상작을 전재한 것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신장투석실에서 근무하던 멋진 간호사 이주현은 지금은 뇌병변 3등급 장애인입니다.

2014년 5월 따뜻한 봄날, 친구 차에 동승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고, 뇌출혈로 인한 왼쪽 편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간호사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건강과 직업과 행복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닌 장애인이 되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3년 동안 힘든 병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완치가 아닌 영구적인 장애로 남은 기능이 없는 왼팔과 왼손 그리고 불안정한 보행으로 앞날을 계획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증까지 생겨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사랑하는 간호사 일도 더는 할 수 없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알바를 찾아 면접도 봤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느 곳에서도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계약직 일자리를 얻게 됐지만, 계약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인의 소개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기업 정규직 장애채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장애인의 사회적인 복지와 혜택에 관심이 없었지만,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장애인 복지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우리나라가 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생 일을 못 할까 봐 막연했지만, 장애 채용의 기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제가 불행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정상인보다 불편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노력과 포부만큼은 정상인 못지않았던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왔습니다.

서류지원에 합격했고, 남은 필기시험과 면접 준비를 위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시간대를 나눠 새벽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공부한 것을 복습했

으며, 주말에는 총 복습과 틀린 연습문제를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면접의 경우 새벽에는 면접 관련 내용 숙지 및 정리, 저녁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 교정과 표정 및 발음 교정, 음성의 높낮이와 속도 등을 항상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며 발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평원의 심사직은 간호사인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으로 입사한 후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업무 시 한 손으로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 손 타자로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었기에 정상인보다 몇 배나 느린 업무 속도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던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한 손 특수 키보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신청으로 키보드 자판 배열이 다른 특수 키보드를 지원받았고, 약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집에서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빠른 한 손 타자로 업무 속도의 큰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저로서는 지금 제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공공기관 장애채용 취업 기회 덕분에 막막했던 장애인의 취업이 보장되었고, 업무의 질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회사가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살렸고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채용이 저를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



김정민
이데일리 경제부 부국장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만 내년에 585조 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549조 6천억원보다 89조 3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매년 수십조씩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가 감내하는 이유는 공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이 민간과 비교해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사활을 걸고 싸우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경쟁이 있다고 해도 퇴출이나 도태될 걱정이 없다. 반복적으로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오랫동안 공공기관 경영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극행정제도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 기업들은 민간을 벤치마킹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도입한 지 37년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적극행정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영평가는 국정과제 수행뿐 아니라 재무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고, 적극행정제도는 '공무원=복지부동'이란 인식을 깨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성과만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이 정부가 요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적극행정의 대가가 감사와 징계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석탄, 석유공사 등과 같이 정부 정책 수행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해 경영이 악화한 공공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에 무작정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당하지 않다. 이들이 오랜 기간 쌓인 부채를 털어내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키워왔다. 경영평가 전문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다. 적극행정 또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일하게 하고 싶다면 중요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격언은 공공기관에도 유효하다. 채찍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공공기관을 춤추게 할 유인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기업이었다면 큰 포상을 받을 만한 성과를 거뒀도 공공기관에서는 표창장 하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승진제도를 만들고, 성과급 지급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아직 아쉬운 수준이다.

삼성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당사자도 놀랄 정도의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송곳 같은 질책과 우레 같은 갈채가 동시에 필요하다.●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입장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문자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더 안전한
나은 일상

Ⓜ 공통 주의사항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직원을 소중하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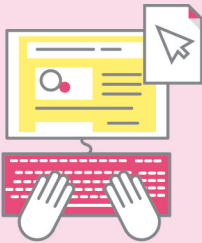
소통은 평등하게

3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4



보고서는
업무시스템으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조직 문화 혁신 이것 부터

5



회의는 똑똑하게

6



생각은
데이터시대에 걸맞게

7



근무는 유연하게

8



의전은 과하지 않게

9



정시퇴근은 당연하게

10



회식은 건전하게

* 행정안전부 "90년생 공무원이 왔다(20)", 고용노동부 "근무 혁신 10대 제안(16)" 참고